

# 정부조달 전기용품, 납품업체 부담은 줄이고 안전관리는 강화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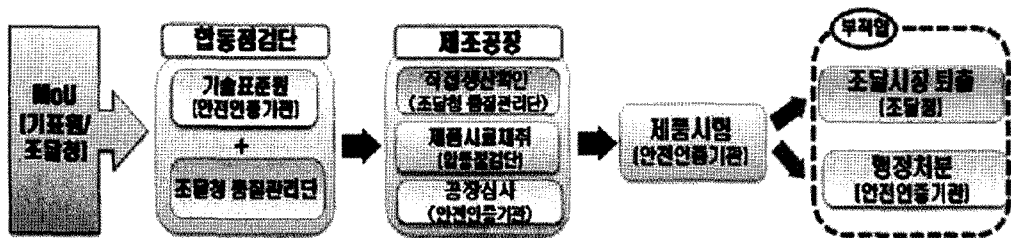
기술표준원과 조달청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

▶ 문 의 :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(02-509-7244)

## 개요

- 올해부터 복사기, 온풍기 및 냉난방기 등 안전인증대상 정부조달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점검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  - 최근 소셜네트워크(SNS) 사이트는 급증하는 이용자( '09년 8억 3천만명) 및 강한 전파력 등으로 기업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
  - 정부조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하여 안전인증업체의 이중 점검부담을 줄이고 점검 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제품을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- 그간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와 더불어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,
  - 조달청은 안전인증을 받은 정부조달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왔다.
    - \* 지난해 기술표준원은 국내 3,577개(국내외 6,345개) 안전인증업체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달청은 97개 조달 납품업체에 대해 추가로 안전 점검을 실시
-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인 기술표준원과 조달청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장심사(시료채취) 및 제품시험을 함께 실시함으로써
  - 정부조달 전기용품 납품업체가 이중으로 받던 공장심사(시료채취)에 대한 부담과 제품시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- 또한, 양 기관이 합동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동시에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- 실제 합동점검이 실시되면 정부조달 전기용품 납품업체 수는 적지만 연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규모 (1,490억/ '09년)가 커서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제품안전관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.



-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이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공신력과 안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정부 조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
  - 전기용품 제조업체들도 안전한 제품만이 조달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했다.
- 또한, 양 기관은 금번 전기용품에 대한 업무협력 실효성을 조사·분석한 후 협력 범위를 공산품 분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
